보도

교수의회 "10차례 논의도 부족"

교수업적평가 개선 건의안 제출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교수의회를 포함한 몇몇 우리학교 교수들이 이번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교수의회와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는 각각 '2017년 개정된 교수업적평가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건의안'을 교무처에 제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무한 경쟁 유도 ▲소통의 부재 ▲과도한 업무 요구 ▲징벌적 시스템을 주된 문제로 짚었다.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4개였던 평가단위가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7개로 세분화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기국(프랑스어학) 교수는 계열별 평가에 대해 "소속 단과대인 외국어대학에서 최하위 등급인 G등급이 아니더라도 타 단과대학과 함께 평가했을 때 G등급일 수 있다"며 "소속 단과대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 교수들의 실적을 가늠할 수 없어 무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말해 단과대학별 평가로의 환원을 요구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전 교무처장 박광헌(원자력공학) 교수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기존에도 단과대학별 평가는 반영이 안됐었다"며 "기존의 네 개의 평가단위 계열을 확장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교무처 지은림 처장은 "최종적으론 학과별 평가단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계열의 확장 및 세분화를 '과도기'로 표현했다.

내년 상대평가 두고 경쟁 과도 우려 나와

절대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2019년 시행될 상대평가가 교수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지 처장은 "E, S1, S2, G 등급의 절대평가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우선 2019년은 상대평가로 시행한 후 2020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경희(외식경영학) 교수는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2019년에 한정적으로 G급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연봉 인상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수이 교수(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수업적평가 개선은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사안"이라며 "단과대별 소통뿐 아니라 교수 전체를 모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호(동서의학대학원) 교수 또한 "평의원회에서 학사 규정 개정안 하나가 통과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으나 교수업적평가에 있어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처장은 "교수님들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업무연락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등 1년 간 소통을 하려 많이 노력했다"며 "교수님들의 요청에 대한 반영 여부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 피드백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 부재 지적에 교무처 "피드백 이뤄졌다"

이번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의 주 골자인 교육, 연구, 실천 총점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교수의회는 교무처에 제출한 이의제기 자료를 통해 "교수들의 업적을 연구, 교육, 실천으로 3등분해 교수 1인이 감당하기 힘든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이(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또한 "교수가 그간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을 항목화해 평가하는 것은 그것 모두를 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광헌 교수는 "기존 제도는 교육, 연구, 실천 각 분야의 만점을 설정해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반면 개선안은 세 분야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설정한 후 이를 비교해 평가한다"며 "개선안은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점수를 득할 기회가 있어 기존보다 큰 업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과대학별로 연구, 교육, 실천의 비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 처장은 "취지엔 동의하나 단과대학이나 학과 별로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이 목표로 하는 '보상' 시스템이 수용자 입장에선 오히려 '징벌' 시스템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잇달았다.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교수의회는 이의제기 자료에서 이번 개선안을 "다방면의 세분화된 점수 체제를 통해 '평가와 관리의 대상'인 교수를 세밀하게 감점하고 징벌하는 시스템"으로 표현했다. 길재호(스포츠의학) 교수는 "등급을 나눠 하위의 사람을 징벌하고 배제하기 보다는 포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채찍보단 당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헌 교수는 "모든 항목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처장 또한 "G등급을 받은 교수님들 대부분이 연구실적을 거의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학장 평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수이(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학장이 소속 단과대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다가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장 평가 신설 후마 "교수 사회 억압 될 것"

지 처장은 이에 대해 "단과대 학장이 평가점수와 함께 그 점수의 근거를 부총장에게 제출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학과 내 전반적 분위기가 학과 간 점수 차이로 반영될 수 있으나 학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10점 이내의 점수만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적의 양적 평가보단 질적 평가를 중시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경희(외식경영학) 교수는 "호텔관광대학 문화컨텐츠학과의 경우 교수님들의 출신 전공이 상이해서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외부 전문가나 저명한 학자에게 평가를 맡긴다고 해도 개인의 편견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처장은 "학과 차원에서 세부적인 질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광헌 교수는 "계열별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이나 세부항목을 계속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표출해주길 당부했다.

2년 초과 기간제 직원

정규직 전환의 문 열릴까?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올해 1월부터 경희대 노동조합(노조)과 인사처가 6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TF'에서 노조와 학교 양측이 현행 노동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두고 노조와 학교가 의견 접근에 다가갔다"며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정규직 전환 등 고용보장을 전제로 학교가 구체적인 부분을 다듬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조 김영진 사무국장 또한 "법적인 정규직 전환 의무에 대해서는 학교 측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언급해 노조의 입장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인사처도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보장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노조와 학교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우리학교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1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인사처는 기간제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소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자체조사에 나선 노조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우리학교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640여명으로 추산하는 한편, 이들 중 '연속근무를 통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90여명과 '2년 만근 후 일정 기간 근무단절과 추후 재계약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40여 명 등 모두 1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학교가 고용보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위원장은 "연속근무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90여명은 현행 기간제법에 따라 학교가 반드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근무단절과 재입사를 통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40여 명은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례로 정규직 전환이 권고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편법 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이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년근무→퇴직→재입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재입사한 비정규직 직원이 1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15회 한 비정규직 직원도 164명에 이르렀다.

소위 '비정규직 돌려막기'라고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문제가 지적된 곳은 비단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다. 우리학교 3개 직원 노조와 행정실 무진에서까지 그간 우리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 재입사가 성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처도 일정부분 이를 인정했다. 인사처 박진호 팀장은 "현황파악이 이뤄지고 있다"며 "2년 근무 후 경력단절 등을 통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간제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이 재입사를 거듭했다는 것은 학교가 이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장은 "자체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재입사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세 차례, 네 차례 재입사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채용권한은 학교에게 있다. 학교 스스로가 이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장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입장에 인사처는 이번 문제를 우리학교 거버넌스와 연결 지으며 다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인사처 박진호 팀장은 "만 55세 이상, 체육종사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등 기간제법 예외조항을 따져보면 실제 정규직 전환 의무가 학교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적은 편"이라며 "우리학교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수치나 답변을 제시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번 TF를 통해 2년 단기계약 내 놓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제도 신설을 앞으로 남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TF의 골자로 잡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교에 대한 숙련도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시험이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널 형성을 위해 향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제도 신설을 앞으로 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TF의 가닥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회의록 공개 아직까지 전무 … 국제캠-서울캠 "2학기 개강 전 올리겠다"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학생 자치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회의록이 양 캠 모두 올해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 우리 신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지만, 관리 실태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는 올해 있었던 중운위 11차, 확운위 3차까지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카페(cafe.naver.com/khuch2015)에는 50대 총학에서 관리하는 회의록 관련 메뉴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회의록뿐만 아니라 회의 결과에 대해선 주세법 관련 입장문 외엔 공개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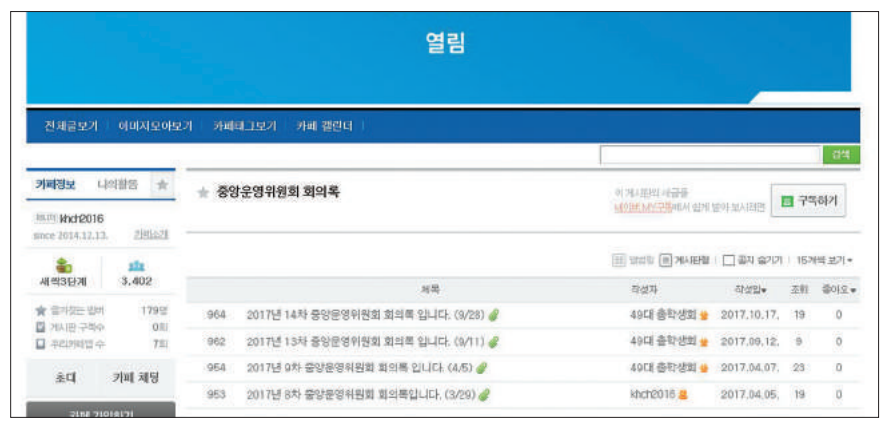
국제캠 총학 측은 "회의록은 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다"며 "네이버 카페는 현재 이용률이 저조해 Info21에 맞춘 홈페이지 신설이나 재정비를 논의 중이라 업로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이 결정되면 그동안의 회의록을 올릴 예정이며 시기는 2학기 개강 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서울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학 홈페이지(jaju.khu.ac.kr), 페이스북 페이지도 작년을 끝으로 회의록이나 안건지를 게시하지 않아 실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있었던 중운위와 확운위, 15차까지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과 더불어 비대위에서 사용했던 자치회비에 대한 명세도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희완 전 비대위원장은 "자치회비 공시와 함께 회의록을 곧 업로드 하겠다"고 해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는 양 캠퍼스 측 대응에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며 "학생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학생회칙에 기반해서 소통창구를 열고 회의록을 반드시 게시해야만 할 것"이라며 문제성을 지적했다.

중운위는 총·부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등으로 구성돼 학생회 전체예산과 업무수행을 비롯한 사안 등을 검토, 조정, 심의하는 운영기구이며, 상위 개념인 확운위는 학생회 전반의 활동 방향과 사업 등을 다루는 심의, 운영기구다.

국제캠 학생회칙 7장 제62조 2항은 '본회(총학)의 운영, 의결기구의 회의 결과와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캠 학생회칙 제55조 1항에는 '정기결산 보고는 월별 보고를 기본으로 매달 첫째 주에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3조의 6조(책임) 1항과 제34조의 5조(책임) 1항은 각각 일정 조건의 무기명 투표를 제외하곤 '모든 의사결정은 실명 기재하여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회의록 공개 의무 불이행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됐다. 앞서 우리 신문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 캠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지만, 해당 문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김지은(철학 2015) 씨는 "각 회의기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계속 회피한다면 그들을 믿고 맡긴 학생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